

주요국선 이자논의 등 제도 편입… 국내선 관련논의 미진

‘스테이블코인’ 현주소

美 클래리티법·지니어스법 등 논의 유럽연합·일본 등서 제도권 편입
李 대통령, 작년 대선공약 했지만
국내선 입법만 1년 가까이 지연중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하고 있다.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실물 시장 도입을 위해선 ‘차세대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활성화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초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뒤처지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쟁점

4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은행권과 디지털자산업계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Law·가상자산시장구조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조속하게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자 지급 등 쟁점에서 견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놓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뉴시스

‘클래리티법’은 개별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규제기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함께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안이란 평가다. 다만 지니어스법은 법안 실행을 앞둔 반면, 클래리티법은 미 상원에 묶여 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거래소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업권 사이의 견해차가 분명해졌다.

현재 쟁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허

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통과된 지니어스법은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을 금지했는데, 같은 기준을 거래소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은행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허용 시 은행권 예금이 빠르게 이탈할 것이며, 나아가 기존 금융 질서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 이자 지급이 허용돼야 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선택권

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차세대 기준’ 부상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이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차세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대다수는 이더리움(ETF)과 트론(TRON)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유통된다. 이들 네트워크는 높은 안정성 및 확장성·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 디지털자산 거래에 용이하지만,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로 논의되는 간편결제·송금 등에는 부적합하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송금 및 결제에 걸리는 시간도 수십 초 이상으로 길어진다.

코빗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코인 전체 유통량의 94%는 디지털자산 네트워크 내에서만 활용된다. 실물 경제에 활용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당시 예측했던 ‘안정적이고 빠른 결제 인프라’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입법 지연…경쟁력 지속 악화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가 미진하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관련법 입법이 1년 가깝게 늦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5월 대선 유세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각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발행요건과 감독 기구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견해차로 관련 논의가 지연됐다. 작년 6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최초 발의한 여당은 2월 내 당론을 결정해 3월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를 내놓은 상황이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입법 지연에 우려하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업계 관계자는 “핀테크·간편결제 등 관련 업계에서는 원화 코인 발행을 준비하며 법안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법안 처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도 상장 등 주요 현안이 기본법에 함께 묶여있고,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기본법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어 법안 통과를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자동차보험료 오른다… 이달 1.3~1.4% ↑

손해율 급등에 5년만에 인상국면
삼성화재 등 11일부터 인상안 반영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2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대 인상하면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인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으로 거론되는 80%대 초반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는 데다 정비 원가까지 오르자 업계는 “요율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1.4% 인상안을 반영하고,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16일부터 각각 1.3%, 1.4% 인상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18일, 메리츠화재는 21일부터 1.3% 인상을 예고했다.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통상 ‘책임개시(갱신·신규) 계약’부터 반영되는 만큼, 2월 중순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운전자부터 인상분을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인상의 1차 배경은 손해율 악화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4개사(삼성화재·현대해



Chat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미지.

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만 때어 보면 4개사 손해율(단순 평균)이 96.1%까지 뛰어 전년 동월 대비 3.3%포인트(p)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월 손해율이 96%를 넘어선 것도 6년 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손해율을 끌어올린 요인이 ‘빈도’보다 ‘단가(사고 1건당 지급액)’로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 연말 계절 요인에 더해 수리 공정의 복잡화, 부품비 상승, 경상환자 과잉진료 논란 등 비용요인이 겹치면서 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정비 공임에 따라 인건비와 수리 비용

이 시간당으로 쌓이는데, 공임이 2~3%만 올라가도 사고 수리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며 “손해액이 증가하면 손해율(손해액/보험료)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비 원가 상승도 부담이다. 자동차보험정비협회의는 2026년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정비수가) 조정률을 전년 대비 2.7% 인상으로 의결했고, 1월 1일 입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상폭이 1%대에 그친 것은 원가를 전부 반영한 인상이라기보다 의무보험 특성과 소비자보호 기조를 감안한 ‘최소 조정’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자동차보험료는 의무보험이자 물가와도 연계되는 민감한 항목이어서, 보험사가 손해율·원가 압박을 호소하더라도 인상 폭을 크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과장이 큰 이슈”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LH,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온라인 수행

G4B 내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 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매기는 사전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부대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 인정됐다.

LH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

던 사전 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온라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앞으로 인정 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인정서 위변조 방지와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했다.

/성재리 인턴기자 cr56@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

이달 최종안·초안 발표하기로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이후 4월까지 로드맵을 확정한다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사진)이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산업계·투자자·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공시기준 및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포함 여부와 최초 의무공시 시점을 둘러싼 이견 등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달 말 발표할 초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작성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



안의 주요내용이 공유됐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2024년 4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공시기준의 전반적 틀에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은 스코프3 공시 포함 여부다. 스코프3는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스코프1)나 에너지 소비로 인한 간접배출(스코프2)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한다. 경제계는 “광범위한 공급망 데이터 수집·측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스코프3를 공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DB손보, 결산배당 7600원… 11.8% ↑

주주환원 확대… 밸류업 의지 확인

DB손해보험은 2025회계연도 결산배당으로 주당배당금(DPS) 7600원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보험업 전반의 손익 둔화에도 전년 대비 11.8% 배당을 늘려 주주환원 확대 기조와 밸류업 계획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저성장 기조와 손해율 상승 영향으로 전반적인 손익 감소를 겪었다. DB손보 역시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줄어 배당 확대 부담이 있었지만 주주환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했다. 실적 둔화에도 배당을

늘린 결정은 자본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이다.

이번 배당은 DB손보가 2025년 초 공시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의 연장선이다. 당시 DB손보는 오는 2028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주환원율을 3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배당 결정이 그 구체적 실행이라는 평가다.

DB손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